

재해를 감소 추세 속에 중상해재해 비중은 증가

산업재해의 발생추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64년 이후 65년 5.91%를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83년부터는 계속해 감소, 98년에는 0.68%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망자수와 영구히 장애가 남는 신체장애자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들어서도 건설현장의 대형 재해와 석유산업단지의 폭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매년 사망·재해자 10%, 근로손실 5%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신 산업안전선진화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 산업안전선진화계획의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재해를 감소 추세는 지속되었으나...

99년 5월말 현재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재해자는 19,380명으로 전년동기 21,359명에 비해 9.27%(1,979명)가 감소하였다.

재해율도 0.25%로 전년동기 0.28%에 비해 0.03%P가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재해감소의 원인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식과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망재해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재해 중 사망을 포함한 3개월 이상 중상해 재해의 비중은 증가하였고, 재해의 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은 0.79로 사망재해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13P(14.13%)

가 감소하였다.

재해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자는 전년동기 444명에 비해 215명(48.42%)이 증가한 659명이 발생하였다.

이는 뇌·심질환자가 전년동기 159명보다 103명(64.8%) 증가한 262명 발생하고, 기타 난청·신체부담작업·진폐로 인한 업무상 질병자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고용조정 과정의 실직우려, 분의 아님 배치전환,

경제유발적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증가와 인력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가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99년 5월 말 현재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조 6,270억 원으로 전년동기 3조2,212억원보다 5,942억원(18.45%)이 감소하였다. 근로손실 일수는 1,465만 일로 전년 동기 1,661만 일에 비해 196만 일(11.8%)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재해·사망자 1인당 평균 산재보상금 지급액도 감소해 재해자 1인당 보상금은 전년동기보다 10.12%가 줄어든 27,111천원(98년 5월 30,163천원), 사망자 1인당 보상금은 8.03%가 줄어든 68,935천원(98년 5월 74,956천원)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 선진국 비해 특히 높아

산재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64년 이후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65년 5.91%로 최고의 산재율을 기록한 이후 83년(3.98%)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다 이후 계속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98년까지의 총 재해자는 312만 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4만 9천명, 직업병자는 3만5천명으로 연평균 8만9천명의 재해자와 1천

4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전반적인 재해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사망만인율: 한국(98년) 2.92, 일본(97년) 0.39, 미국(96년) 0.48, 영국(96년) 0.10) 또한 전체 재해자중 신체장애자가 차지하는 비중(장해재해 점유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의 경우 98년 한해만 보더라도 7조2천553억원에 달해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의 4.4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적 손실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에 의해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전환되는것 같이 보이거나 결국은 사업주의 손실로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경기 회복과 더불어 재해 증가될 전망

올해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재해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의 재해 발생률은 계속해 증가 추세이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배치전환과 인턴·과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안전지식 부족에 기인한 대형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

또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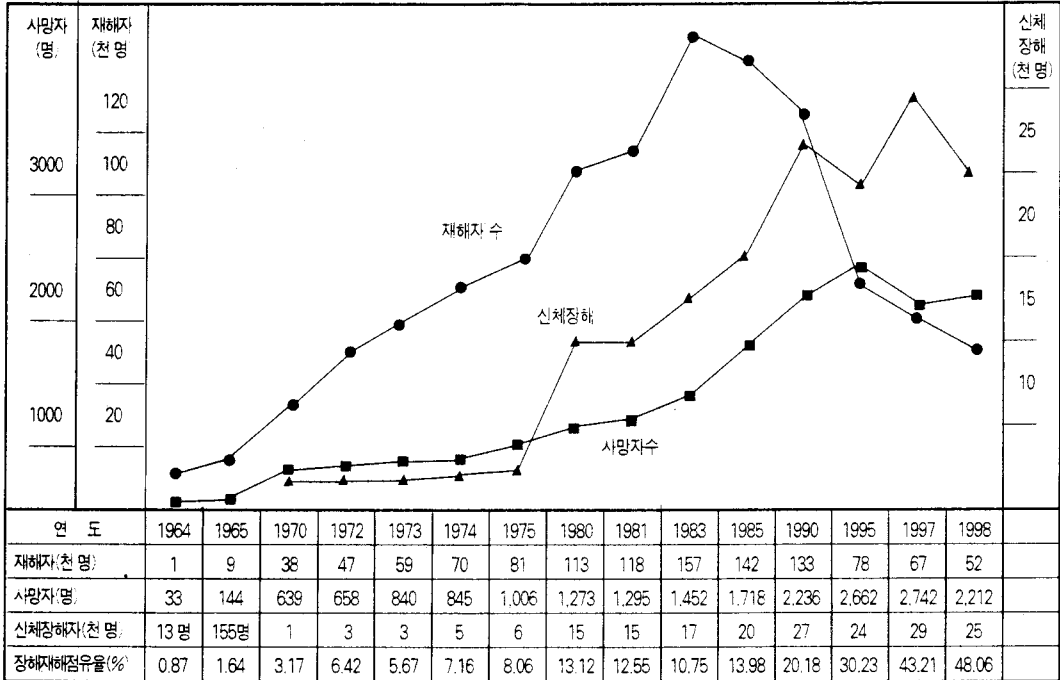
급속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성 질병 및 VDT증후군 등 신종 직업병도 증가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경제회복에 따른 경제 우선 분위기에 따른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후퇴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축물·가스·전기 등 '시설 및 설비의 안전'간에 나타나는 중복규제의 해소에 관한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91년 최초의 종합적 안전보건계획인 산재예방 6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96년에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 다각적인 산재 예방활동을 전개해 온 데 이어 지난 4월 산업안전국장을 단장으로 각계 전문가 45명이 참여한 '신 산업안전선진화계획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동 기획단은 21세기 산업구조, 고용양태, 안전의식 등 산재 예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국내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산업현장을 구축하고,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며, 인명이 최우선되는 안전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연도별 사망 등 중대재해 추이



장해재해점유율 = (신체장해자/재해자) × 100

기획단, 추진계획 1차시안 마련

기획단은 이미 토론회와 분야별 세미나 등을 개최, 재해예방단체, 학계, 사업장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차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8월말까지 2차 시안을 작성하게 되고, 9월 중 2차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9월말까지는 계획안을 완성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1차 시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체제 구축

최근 3년간 제조업의 사망재해 분석결과에 의하면 추락, 협착, 낙하, 비래, 감전, 붕괴, 폭발 등의 재래형 재해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또 생활습관의 변화와 근로인구의 중·고령화에 따라 작업관련 뇌혈관·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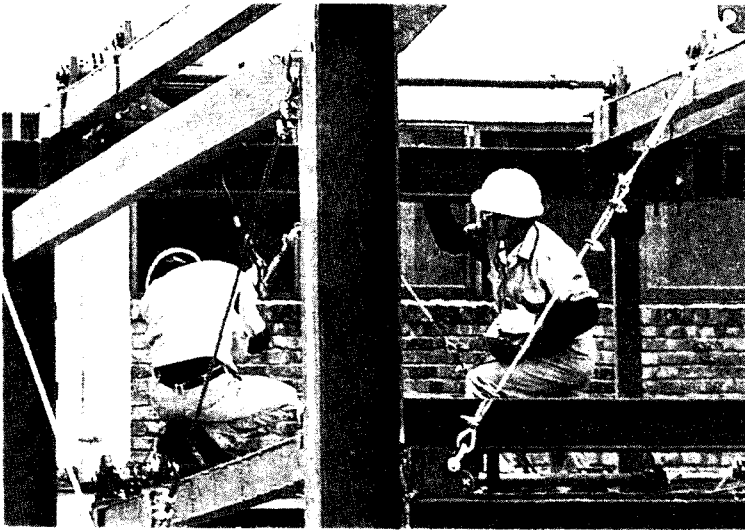
따라서 전담팀을 구성, 재해다발 기계·설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재해다발요인 업종별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추락재해의 주요기인물인 8대 가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제를 실시하는 등 재해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작업관련 뇌·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사업장 보건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진단을 통한 유소견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체제 강화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PSM)제도가 석유화학공장 등 대형 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데 크



게 기여하고 있으나 적용대상물질이 21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고,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와 초기 비상대응업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PSM제도 적용대상유해·위험물질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미국 260여종, EU 180여종)으로 확대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행능력 평가지표를 개발, 사업장별 차등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현재 화학공장 안전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안전공단 산하 '위험설비센터'를 가칭 '중대산업사고관리국'으로 개편하여 예방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연계 종합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가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등에 충분히 제공되도록 해 위험정보의 공유 및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 반복형 건설재해의 근원적 재해예방체계 확립

건설공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 전단계에 걸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건설재해 예방은 시공자인 사업주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도움이 있고 무계획한 작업진행과 현장지도·점검체계의 미흡으로 효율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기준의 약 17%에 불과하나 공사건수로는 83.8%를 점유하고 있고, 재해도 전체 재해의 47%를 차지, 이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술지도가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계획, 설계, 시공 등 공사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표준 안전관리비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건설업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 가시성물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안전 연구활동을 강화, 건설안전제도 발전 및 실질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 해소

현재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기계기구의 보유가 많아 재래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시스템의 자동화·정보화로 인해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공학을 접목한 효율적 재해예방사업의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해 안전보건여건이 열악한 중소규모사업장의 시설 개선 및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산업시설, 작업장, 작업환경 조성시 인간공학적인 리가 반영되도록 인간공학적인 사고예방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농업·임업·서비스업 및 파견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계층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 건강증진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요인 보유 작업공정은 연 2회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 작업환경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측정대상의 제한으로 옥외작업 근로자 및 비법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수건강진단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병은 정기적 건강진단보다는 대부분이 직업병 역학조사 등에 의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따라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유해물질 분류체계의 현실화를 통해 작업환경관리 수준을 높이고 유해물질의 누출기준을 재정립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작업환경 측정·분석방법을 개선해 측정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인 직업병 감시체계를 통해 신종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암물질 취급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장의 자발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사업장간의 안전보건관리 기술 및 정보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나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안전협의회의 조직구성과 재해예방 활동이 미흡한 상황으로 기존에 구성되어 있다해도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또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시 계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업종별로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한 재해예방을 유도하고, 각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범국민 안전생활의 선진화 및 민간역할 확대

그동안 사업장 무재해운동, 교통안전캠페인 등 각종 안전운동이 분야별로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추진조직 상호간의 협조가 부진하고 예산 등 안정적 뒷받침이 미흡해 활동에 제약사항이 많았다.

따라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노사단체 및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

구(NGO)의 안전활동을 지원하고, 안전문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봉사대 등 민간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교육이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다단계화하고 체계화하여 평생안전교육 체계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경쟁력 제고 추구하는 산업재해예방제도 개혁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관리 법률은 8개 부처에 25개 법령이 산재해 있어 유사한 유형의 안전관련 제도가 개별 법령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중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들로부터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안전기준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요율상의 인센티브 부여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정 대상기업의 국한으로 인해 유인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따라서 재해예방과 산재보험료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중복성을 제거함으로써 안전보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기준·규정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